

설명자료



배포일시	2017. 8. 18. (금)	보도시점	배포 즉시
담당과장	소방정책과장 권대운	연락처	044-205-7410/010-5389-8588
담당	지방소방지원팀장 나윤호 지방소방조직담당 김영표	연락처	044-205-7416/010-9145-5119 044-205-7417/010-4053-9119
쪽수/붙임	2쪽 / 없음	대변인실	044-205-7016/010-9178-9857

「정부, 40년 넘은 잣대로 “소방관 2만명 증원”」 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□ **보도내용** (한국경제신문, '17. 8. 18.(금), 18:02)

〈보도요지〉

- 소방공무원 2만명 증원계획이 폐기 예정인 낡은 기준을 근거로 산정
- 「새 소방력 배치기준 연구」로 과거 잣대 이미 '부적합 판정' 받아
- “10월까지 효율적 배치안 내라” 정부, 뒤늦게 소방청에 지시

□ **사실은 이렇습니다.**

- 소방공무원 2만명 증원 계획이 40년된 낡은 기준으로 산정되었다?
 - 소방력 산정 법적기준인 「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」은 1976년에 제정된 뒤 소방수요와 지역특성 등 소방환경을 반영하여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쳐 개정되었음(최근 2012년 개정)
 - * 현재 선진국(미국, 일본 등) 또한 차량, 인구, 면적 등에 따라 소방력 산정
- 「새 소방력 배치기준 연구」로 과거 잣대 이미 '부적합 판정' 받아?
 - 관련 연구보고서는 학자적 시각에서 다양한 소방환경 변수를 적용하여 소방력을 산정하였으나, 현실에 도입했을 경우 특정지역의 특수성(예 : 서울의 경우 유동인구, 인구밀집도, 고층건물밀집도 등)이 반영되지 않아 향후, 시·도 의견수렴, 시범운영 등을 통해 검증하여 법령개정 등에 반영할 예정임

○ “10월까지 효율적 배치안 내라” 정부, 뒤늦게 소방청에 지시?

-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시 공무원 채용 관련 국회 부대 의견으로, 정부는 기존 공무원(소방 포함 전체 공무원)의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및 인력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인용된 것으로 상기 기사내용과 같이 정부에서 소방청에 단독 지시한 사항은 아님

□ 향후계획

- 향후 이러한 연구용역을 참고하여 시범운영 및 현장의견수렴 등을 통해 소방력 운영의 효율화 방안 등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고, 국민안전을 위한 소방현장대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음



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
소방청 소방정책과 지방소방조직담당 김영표(☎ 044-205-741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